

“5·18 당시 군 지휘 흔재… 민간 희생 증가 원인”

SOCIETY

2025년 5월 1일 목요일

‘해석 영역서 본 실제적 진실-5·18과 계엄’ 심포지엄

노희준 교수 “신군부 공수부대 직·간접적 지휘 운용”
공식 승인 없이 시위대 강경 진압… 시민 조준 사격도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가 치안유지 부대가 아닌 신군부로부터 직·간접적 지휘를 받아 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식적·비공식적인 지휘체계가 혼재되면서 민간인 희생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제적 진실-5·18과 계엄’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제2주제 ‘5·18광주지역 계엄군 작전 운용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노희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1980년 5월 17~27일 진행된 광주항쟁에서 계엄군의 운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신군부의 정치적 목적, 군 내부의 권력구조, 그리고 군사작전의 비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운을 폈다.

특히 노 교수는 5·18 당시 공수부대의 배치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980년 당시 광주지역 방어와 치안유

지 부대는 전두교육사령부(전교사)와 31사단이었지만 신군부는 해당 부대가 아닌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수부대는 대테러·특수 작전 수행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당시 신군부는 일반적인 계엄군(보병사단)이 아닌 공수부대를 배치해 강경 진압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사와 31사단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됐으며, 실제 작전지휘는 특전사령부가 주도하는 등 공수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같은 주장은 ‘공수여단의 시위진압 관련 작전 상황’이 특전사에만 보고되고 지역 부대에는 보고 되지 않았다’는 전교사 부사령관의 진술, 특전사 작전상황실이 전교사에 설치됐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노 교수는 당시 계엄군에 공식 지휘체계와 비공식적 명령 구조가 혼재돼 있어 계엄군 내에서 일부 자의적 작전 수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민간인 희생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즉, 비공식 지휘체계가 가동되면서 공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제적 진실-5·18과 계엄’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식적 승인 없이도 강경 진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인을 향한 발포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의도적·조직적·집단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 교수는 1980년 4월 ‘동원탄좌 육군 작전명령’을 근거로 삼으며 ‘발포는 계엄사령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서류의 ‘3. 실시’에 보면 ‘총포의 사용은 여하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군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지역사령관 명에 의거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백남이 전교사 작전참모도 ‘신군부-정호용사령관-여단장’ 계통으로 실탄지급과 발포명령이 내려갔다는 검사의 질문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조준사격 없이 우발적 발포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총상사상자 발생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직접 조준사격에 의한 민간인 사살이 없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울러 명령(지시) 없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계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준사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특히 시위대와 상호 교전 아닌 ‘일방적 정호용사령관-여단장’ 계통으로 실탄지급과 발포명령이 내려갔다는 검사의 질문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조준사격 없이 우발적 발포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총상사상자 발생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직접 조준사격에 의한 민간인 사살이 없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울러 명령(지시) 없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계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준사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불량 부품…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광주·전남환경단체 “국민 안전 담보한 위법 행위” 규탄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불량 부품을 납품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며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불량부품 관리 부실 문제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 자격이 없으며 노후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한빛원전은 냉각재 정화와 농도 조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전동기 베어링을 무더기로 모조품으로 납품받고도 몰랐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파렴치한 범죄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이 모조품인 경우 방사선, 고온, 고압 환경에 버틸 수 없어 파손, 누설, 기능 상실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신고리·신월성의 사례를 들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 신고리·신월성 원전에서 가짜 품질보증서(PQ)로 납품된 불량 부품 문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됐고, 2013년에는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 비리가 또 적발됐다”며 “반복되는 원전 부품 비리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무책임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번 한빛원전 모조품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모조 부품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다”며 “이미 설계 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에 서조차 이토록 부실한 자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 수명 연장 자체가 전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재앙 같은 일이다. 노후 핵발전소는 더 늦기 전에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육설·세탁 심부름’ 구의원 솜방망이 징계 후폭풍

북구의회, 최저수준 징계 ‘공개경고’ 최종 의결
이의 제기·표결… 공직사회 “받아들일 수 없어”

직원에 대한 육설과 세탁 심부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형수 북구의회 의원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수용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김형수 의원의 징계(공개 경고)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징계 양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권한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과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는 갑질 피해 신고자와 김형수 의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육설뿐 아니라 수행 비서에 대한 폭언과 세탁 심부름 등 사적 업무 지시를 모

두 포함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구의회의 이번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하게 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의정혁신과지방자치발전추진시민연석회의는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며 김 의원을 규탄했다. 일부 북구의원들도 본회의 의결에 앞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결국 비공표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외한 19명이 투표를 했고, 최종 12:7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손해진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윤리특위는 외부전문가들이 엄중히 청취, 육설뿐 아니라 수행 비서에 대한 폭언과 세탁 심부름 등 사적 업무 지시를 모

공개 경고라는 징계가 의결된 직후, 모든 것을 예정했다는 듯 형식적인 사과를 내놓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북구의회 정치가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라며 “동료 의원의 명백한 잘못조차 감추는 자정능력이 상실된 모습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내부 직원의 고통에 침묵하고, 제 식구를 감싸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며 “오늘은 동료 의원들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은 “육설과 사적 심부름을 시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것에 직원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례를 남긴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형수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직원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세탁, 금품업무, 사적 모임 수행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산화 기자

여고에 2m 대형 뱀 ‘출현’

만년필 ○…여수의 한 여자가동학교에 약 2m 크기의 대형 뱀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져.

30일 전남소방본부와 여주소방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57분 여수시 안산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 뱀이 출몰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교사 10명이 운동장에 모여 테크 안에 숨은 뱀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다행히 뱀에 물린 사람은 없어. 뱀은 약 2m의 큰 크기인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은 테크 안에 있는 뱀을 꺼내 포획하려고 했으나 테크에서 꺼내진 뱀이 산 쪽으로 도망치면서 잡지 못했다.

소방 관계자는 “다시 뱀이 출몰한다면 재신고 해달라”고 당부 후 철수.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농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